

# 내달 50대 백신접종 시작... 18~49세 8월부터 선착순 접종

##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접종못한 60~74세 최우선 대상 고3·교직원 19일부터 '화이자'

50대 26일부터 접종... 종류 미정 40대 이하, 백신별 접종일시 선택

40·50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시작된다. 50대가 우선 접종자로 분류돼 7월 접종을 시작하고, 18~49세에 대한 접종은 8월부터 나이에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50대 미만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백신별 접종 기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7~9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공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60~74세 사전

예약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7월 최우선 접종 대상이 된다. 20만명까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접종하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7만여명도 이달 예약을 받아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접종 동의자에 한해 7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19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된다. 6월에서 한달 연기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된다.

60세 미만 일반 국민 가운데는 50대가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 50대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7월 26일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55~59세부터 시작해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는다. 50대에 배정될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8~49세 등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오는 8월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한다. 이 연령층은 백신 종류가 정해진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개인이 백신별 접종 일시와 기관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하다. 3분기엔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3분기 백신 접종은 2차 접종자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6만명은 7월 2차 접종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한편, 이날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명을 넘어서며 상반기 1차 접종 최대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 전 국민의 27% 규모다. 백신 권장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전 인구의 7.3%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구분	접종 대상	사전예약	접종	기관
1 50대 등 우선접종 대상 17만명	6월 60~74세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6월 사회필수인력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10만명 7만	6월28일~30일 7월5일~17일	예방접종센터
2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190만명	고교 3학년 및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돌봄인력 기타 대입수험생	64만 110만 16만	7월19일~ 7월 중 8월 초 8월 중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3 50대 장년층 857만명	55~59세 50~54세	407.9만 449.1만	7월12일~ 7월19일~ 7월26일~ 8월 초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4 40대 이하 (18~49세)	접종 3주 전 백신 도입물량 시기 확정 가용물량 확정 사전예약 공지	접종 2~3주 전 사전예약 실시 대상 18~49세 기간 1주일 내외 (온라인, 콜센터)	접종 1주 전 백신배출	접종
5 지자체 자율접종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 고려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7월말 이후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6 사업장 자체접종	24시간 가동 주요 생산공장 자체접종 통해 종사자 접종 편의	8월 중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우선접종자(50대 등) 접종 완료되는 8월부터 시행

※8월 이후 계획은 백신 수급상황, 국내외 연구, 해외사례 등 종합해 검토 자료: 질병관리청 /뉴스시스 그래픽

# “美 기준금리 동결... 우리 금융시장 일부 영향”

##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국내의 금융시장 변동성 다소 확대 유사시 우리정부 대응여력은 충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돼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

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했다.

다만, 연준은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 차관은 “향후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황과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그는 “유사시 우리 정부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테이퍼링은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의미해 백신 접종 후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차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작스러운 테이퍼링과는 달리 세계 경제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그간 충분히 예측되고 적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우리나라 외화보유액

은 올해 5월 기준 456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환매조건부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 안정 수단을 확충했을뿐 아니라 한미 통화스와프도 연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0일 수출이 4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인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18bp)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제 통화정책 기조가 전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급 영향에 대한 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 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 세제 완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연내 아파트 물량 46만 가구로 확대”

정부가 2·4대책 관련 공공매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증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키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을 전국 46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4대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 없이 취득세와 증부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964@